

‘이재명 체포동의안’ 입장 뒤틀려야...8월 임시국회 일정 ‘안갯속’

야 8월 중 비회기 기간 제안에 여 “꼼수, 원칙대로 31일까지”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 처리 변수...국힘 ‘필리버스터’ 맞불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회기 종료일을 정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의사일정을 놓고 힘겨투기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6일 8월 임시국회를 시작했지만 아직 회기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8월 중 비회기 기간을 뒤흔다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꼼수’라며 거부하고 있

다. 양당 모두 이전과는 상반된 태도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년 내내 국회를 열려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해왔다. 민주당의 요구는 국회 문을 닫은 기간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계산이 바탕에 깔려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회기 중에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만 이뤄지고 비회기 중 청구될 경우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중에 최대한 비회기 기간을 며칠이라도 확보하려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상태”라며 “부가적인 불체포특권에 대한 절차 없이 이 대표가 법원에 출두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광은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칙대로 별도의 비회기 기간을 두지 않고 오는 31일에 회기를 종료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원하는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민주당이 로서는 부담이다. 투표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당내 갈등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대거 이탈표가 발생해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진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당내 혼란과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지난 7월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에 한해 불

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의했다. 친명(친 이재명)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야당 탄압에 항의하는 의미로 부결표를 던지겠다는 이야기가 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정기국회 개회 이후인 9월 중이 될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여당은 민주당의 비회기 요구가 명분 쌓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여당은 야당이 본회의에서 정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변용일 기자

LH, ‘전관업체’ 계약 11건 648억원 규모 취소...입찰 참여 원천 차단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7월31일 이후 심사를 진행한 설계공모 및 감리용역 중 전관업체가 참여한 사업 11건에 대한 심사 및 선정을 취소했다.

LH는 20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LH는 현재까지 계약시점에서 제출된 임원 확인서 및 용역업체 우선권을 통해 7월31일 이후 심사·선정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용역 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이날 기준 심사·선정이 완료된 전관업체 참여 설계공모는 총 10건으로 561억원 규모이고, 감리용역은 87억원 규모의 1건으로 파악됐다.

또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설계공모는 총 11건(입찰공고 중 10건·심사진행 1건)으로 총 318억원 규모, 감리용역은 12건(입찰공고 중 6건·심사진행 6건)으로 총 574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해당 현황은 추가 사실여부 확인이

7월31일 이후 진행된 용역 중 11건 심사·선정 취소
심사 완료 전 22건(설계 11건·감리 12건) 공고 취소
국토부, LH 전관업체 DB구축...세부방안 10월 마련

진행 중이므로 추후 추가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 15일 LH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전관업체와의 입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지시사항이 있었다”며 “7월31일 이후 진행된 모든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후속절차를 중단하고 처리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은 용역(22건)의 경우 입찰제안서만 제출해 법률관계가 미성립됐고, 이를 발주부서의 불기피한 사유로 보

아 해당 공고의 취소를 추진한다”며 “심사·선정이 완료된 용역은 LH 전관이 없는 경우 계약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되 전관의 재직이 확인된 설계 10건 감리용역 1건은 심사·선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심사 및 선정이 취소된 용역 11건(648억원 규모)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

정하고 사업순위 조정 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 및 감리용역 업체 선정시 LH 퇴직자 보유업체의 수주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 가점부여 및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를 내부 별도 방침으로 즉시 시행하고, 용역입찰요시 등 LH 내규 개정을 통해 전관업체의 설계 및 감리 용역 참여 전면 배제 방안도 기재부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을 추진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전관 차단을 위해 LH 퇴직자 및 전관업체 전수조사를 진행, ▲DB 구축을 즉시 추진하고 관련기관 협력이 필요한 ▲취업심사제도 ▲전관업체 용역계약 제한 등 방안도 10월 중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DB를 우선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추가 및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기업 확대 등 LH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현재 설계공모 심사 등에서 내부위원 배제, 수의계약 금지 등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관업체의 수주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관업체의 경우 계약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우선 공공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만 아니라 민간 자유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전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LH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부 전체의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에 대해 국토부부터 전반적으로 단절시키고, 나아가 공공분야의 전관 및 심사위원 유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혁으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